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토론회

- **좌 장** 전상인 서울대학교 교수
- **발 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과 문재인 정부의 일탈’
김영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반과 전개’
이선민 조선일보 선임기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누구인가’
- **토 론** 장영수 고려대학교 교수
정경희 영산대학교 교수
주익중 이승만학당 이사
- **일시** 2019년 08월 08일(목) 14:00~17:30
- **장소**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최** 재)한반도선진화재단
재)여의도연구원
- **주관** 사)선진통일건국연합
사)한반도통일연구원
- **후원** 김영우 국회의원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토론회

- 좌 장 **전상인** 서울대학교 교수
- 발 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과 문재인 정부의 일탈'
김영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반과 전개'
이선민 조선일보 선임기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누구인가'
- 토 론 **장영수** 고려대학교 교수
정경희 영산대학교 교수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
- 일시 2019년 08월 08일(목) 14:00~17:30
- 장소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최 재)한반도선진화재단
재)여의도연구원
- 주관 사)선진통일건국연합
사)한반도통일연구원
- 후원 김영우 국회의원

【 프 로 그 램 】

시 간	내 용	
개 회 축 사 14:00~14:30	국민의례	개회 및 국민의례
	개회사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환영사	김세연 여의도연구원 원장
	격려사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축 사	이인제 한반도통일연구원 대표고문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토 론 회 14:30~17:30	좌 장	전상인 서울대학교 교수
	발 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과 문재인 정부의 일탈”
		김영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반과 전개”
		이선민 조선일보 선임기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누구인가”
토 론	장영수 고려대학교 교수 정경희 영산대학교 교수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	

【 목 차 】

개회사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07
-----------------------	----

환영사

김세연 여의도연구원 원장.....	09
--------------------	----

축 사

이인제 한반도통일연구원 대표고문.....	11
------------------------	----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3
---------------------	----

발 제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과 문재인 정부의 일탈"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15
---------------------	----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반과 전개"

김영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33
---------------------	----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누구인가"

이선민 조선일보 선임기자.....	45
--------------------	----

토 론

장영수 고려대학교 교수.....	55
-------------------	----

정경희 영산대학교 교수.....	69
-------------------	----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	75
-------------------	----

개 회 사



박 재 완
(재)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제3대 기획재정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의도연구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뜻 깊은 토론회에 발제자와 토론자를 비롯한 참석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정체성’이란 ‘어떤 존재의 변하지 않는 본질이자 정신’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그 역사의 정체성은 나라를 이루고 유지해 나가는 기초인 국기(國基) 또는 국혼(國魂)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와 국혼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전문이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집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봉건 폐습과 식민 잔재를 극복하고, 6.25 남침에 맞선 호국, 압축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까지 일궈냈습니다. 건국 당시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 지구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대한민국의 기적은 그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자율/창의, 개방/경쟁, 분권/다양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인간 존엄, 언론/‘非지배’ 자유와 사생활/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지지합니다. 다만 ‘자유주의’가 ‘각자도생’의 개인주의, 무정부주의나 (신)

고립주의로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공유/협업, 비판의 관용과 인내, 경청/존중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는 개인을 공동체보다 우선하지만, 전문가의唱導/설득/중재/조정 활성화와 신뢰/투명성/승복/포용/기부/봉사 등 ‘사회자본’ 확충을 추구합니다. 다만 ‘공화주의’가 국가주의, 집단주의나 전체주의로 비약하면 안 됩니다.

셋째, 기회 균등과 다수결에 기초한 ‘민주주의’입니다. 다만 ‘민주주의’ 역시 계급투쟁, 배타적 민족주의, 인기영합주의나 권위주의로 왜곡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법치,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 적정 절차를 부각하는 ‘입헌주의’입니다. 위정자의 재량 남용, ‘人治’나 ‘내로남불’ 등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특히 초중고 교과서 기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개헌안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는 너무나 큼니다. ‘사회민주주의’, 극단적으로는 ‘인민민주주의’조차도 민주주의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광복 74주년, 건국 71주년을 맞아 참된 ‘광복’과 참된 ‘건국’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기틀 위에 통일 한반도를 세우기까지는 참으로 멀고도 험난한 가시밭길이 남아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세미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립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08월 08일

(재)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재완**

환영사



김 세 연
(재)여의도연구원 원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세연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인제 한반도통일연구원 이인제 대표고문님과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재완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선진통일건국연합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 을 거행하면서 수립되었고, 이날 밤 12시를 기해 미 군정청이 통치권, 곧 주권을 이양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영토·국민·정부·주권을 완비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로 탄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과 김원봉 등 당시 전쟁 수뇌부가 자행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살상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이를

부정하게 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며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세력은 진영논리를 앞세워 북한 인사를 미화하고, 심지어 정확한 역사를 배워야 하는 우리 학생들의 교과서를 조작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역사 위기의 시대에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성찰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하시는 만큼 현재 현 정부의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함께 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토론회가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08월 08일

(재)여의도연구원 원장 김 세 연

축 사



이 인 제
(사)한반도통일연구원
대표고문

저는 한반도통일연구원 대표고문을 맡고 있는 이인제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해주시는 석학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복더위와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역사 정체성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주신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분단 당시 서독은 일관되게 게르만민족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동독이 국가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민족 내부에서는 국가가 아닌 특별한 관계의 실체로서만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좌파정당인 사민당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1989년 11월 마침내 동독 주민들이 공산당체제를 무너뜨리자 민주적 절차를 밟아 서독기본법 아래 통일을 성취하였습니다.

우리헌법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전체를 영토로 하며 민족을 대표하는 공화국으로서 역사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이 나 우리 민족내부에서는 통일의 대상으로서 의미를 갖는 특수한 실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헌법에 충성을 맹세한 문정권이 대한민국의 역사 정체성, 즉 국가

로서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평양의 군중 앞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남쪽 대통령으로 소개하는 광경을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은 사람이 저 한사람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강건한 사람도 혼이 빠져있다면 만인의 조롱거리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나라도 정통성이 무너지면 소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투쟁하며 세운 자유의 나라, 산업혁명과 시장경제로 기적을 이룬 나라, 튼튼한 중산층을 기반으로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지평을 연 나라, 이제 그 역량으로 폭압체제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을 해방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나라,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정통성의 위기를 아주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결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토론회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71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은 8. 15 건국의 날을 앞두고 희망과 흥분으로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유산을 지키지 못하고 불태울지 모른다는 절망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제 투쟁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고 위협하는 안팎의 적들에게 더 이상 인내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9년 08월 08일

(사)한반도통일연구원 대표고문 이 인 제

축 사



김 영 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영우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토론회」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재완 이사장님, 김세연 여의도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 오늘 토론에 나설 토론자 및 발제자분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 개최를 준비하신 행사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낭만적 민족주의와 좌편향적 역사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역사 정통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빨갱이라는 단어를 운운하고, 5.18 기념사에서 독재의 후예라 언급했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 6.25 전쟁을 일으킨 김원봉을 광복군과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일국의 대통령께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 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입니다.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며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공

신화를 이룩한 국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생경제 파탄, 외교안보 붕괴, 국론분열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 정통성과 정체성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매우 걱정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편 가르기 정치를 하지 말고 국민 통합과 화합의 정치, 올바른 역사 교육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역사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마련한 아주 뜻 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는 자리가 되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08월 08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 영 우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발 제

대한민국의 역사정체성과
문재인정부의 일탈

김 광 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토론회

대한민국의 역사정체성과 문재인정부의 일탈

김 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I. 역사비교적 평가와 대한민국의 예외성

근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온 가치와 제도는 우리가 겪은 세가지 충격적 경험과 함께 그것을 극복해온 성취 과정이다. 첫째는 늦게까지 계속된 봉건 폐쇄체제에 따른 민족적 낙후(backwardness)에 대한 충격과 그에 따른 문명개화를 향한 일관된 반봉건(anti-feudalism) 근대화의 길이었다. 둘째는 근대화에 앞선 일본의 식민지배에 따른 민족 차별과 군국주의 희생체제를 경험하며 지향했던 반식민(anti-colonialism) 독립번영국가의 길이었다. 마지막으로 국민국가 건설과정에서 한반도 북부에 펼쳐진 공산주의 통치와 연이은 침략전쟁(6.25)과 대량 희생 및 대치를 경험하며 자각하게 된 반전체주의(anti-totalitarianism) 혹은 반공(反共)의 지향이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74년간 일관되었던 반봉건 근대문명화, 반식민 독립번영 및 반공산 자유민주체제의 확립은 우리민족이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태극기라는 상징으로 일궈낸 위대한 성취로 결과였다. 자유와 민주라는 보편가치 실현은 물론이고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국민소득(income)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세계 최고의 비약을 만들어냈고, 무역국가이자 첨단산업국가로 표현되는 것처럼 국가경쟁력과 번영지표에서도 세계적 성공국가의 상징이 되었다.¹⁾

특히, 자주 독립국가를 지향하면서도 결코 폐쇄체제로 가지 않았고, 반공주의 견지하면서도 다른 실패국가들처럼 봉건체제로 회귀하지 않고 개방체제의 유지와 보편가치적 제도들을 안착시켜냈다. 전체주의 공산질서와 싸우면서도 봉건체제를 한도 끝도 없이 천연(遷延)시킨 517년의 조선(朝鮮)의 봉건질서를 대부분 극복해낸 것은 대한민국 역사가 만든 남다른 업적이다. 유사했던 나라의 예로 설명한다면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위치한 유럽의 폴란드(Poland)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대왕정적 봉건체제를 극복하면서, 독일의 파시즘체제와 소련 스탈린(Stalin) 주도의 공산주의를 극복해내며 개방적 산업국가의 길을 어느 정도 성공해냈는가와 비교해볼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걸어온 역사적 노정을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걸었던 그런 수준이 결코 아니며, 극히 예외중의 예외이다.

대한민국 역사의 성취는 측정 가능한 구체적 요소에 대한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1)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Oxford Univ. Press, 1998;

예를 들어 한국에서 누리는 종교 자유 수준과 표현의 자유 수준, 재산권의 보장, 정치참여 수준으로 나타나는 정당과 지도자 선택의 자유, 또는 법치주의와 집회결사의 자유, 남성과 비교된 여성지위 향상 과정 등 각각의 개별 요소를 분리 측정하여 역사적 변화를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어온 문명사적 변화의 폭과 깊이가 얼마나 예외적인 것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주변의 어느 나라에서 한국만큼 종교 자유가 허용되는지, 주변 어느 나라에서 한국만큼 정당과 지도자에 대한 자유선택이 가능한 것인지, 혹은 과연 주변 어느 나라에서 한국만큼 삶의 질이나 산업수준이 향상되었는지를 비교한다면 명확한 것이다.

굳이 북한을 제외하더라도, 중앙아시아나 중동국가 혹은 동남아 국가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과연 중국에서는 정당과 지도자 선택이 가능하고, 또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봐도 알 수 있다. 또 선거가 계속된다는 필리핀이나, 인도 등에서 봉건적 신분제도와 그에 따른 직업차별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기본가치와 제도 변화와 함께 소득 수준, 산업화 수준, 평균수명 혹은 교육수준 등을 비교한다면 한국에서 펼쳐진 문명사적 변화는 거의 유일무이한 예에 해당하며, 신생독립국이나 개발도상국 혹은 사회주의의 길을 갔던 나라들은 대한민국이 걸었던 길과는 확연한 차이를 갖는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 역사과정에서 명확했던 것은 대한민(제)국 국호와 태극기(1882)라는 상징은 모든 근대 가치지향을 담아내는 일관된 틀이었다. 전근대 봉건적 조선에서 근대문명에 대한 충격으로 조선이란 국호를 내리고 대한이란 국호와 태극기를 내걸고 근대 문명개화의 길로 내달렸다. 근대 기관을 설치하는 첫걸음이던 1894년 갑오개혁이나, 청국(淸國)에 대한 의지를 차단하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립하며 조세법정주의와 민형사법을 확립으로 나아간 홍범 14개조 반포,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그리고 공산침략에서 맞서 오늘의 근대 번영국가를 만들어 오기까지 대한민국과 태극기는 보편가치적 정당성과 민족 정통성의 근간이었다. 특히 속방(屬邦)적 위상을 지속시키려했던 중국(淸)이나, 일본의 군국주의 혹은 스탈린-모택동-김일성 공산주의나 오늘의 북한 전체주의의 김정은독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과 ‘태극기’는 한반도를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근현대 역사에서 민족가치와 보편가치를 상징, 대변해왔다.

따라서 문재인정부가 출범이후 보여준 역사인식과 정부행위에 대한 평가는 근현대 140여년의 반봉건, 반식민, 반공산(전체주의) 극복의 연장선과 대한민국 출범이후 74년의 역사정체성에 기반하여 민족가치의 구현 및 자유민주가치의 실현, 그리고 근대 번영국가의 지향에 대한 평가에 맞춰져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민족가치의 구현, 자유민주 질서 및 번영가치의 확립과 확산, 북한과 중국은 물론 일본, 미국

등과 관련된 국제 연대의 틀과 구현해내고자 하는 내용 등에 집중하고자 한다.

II. 민족 가치의 전도와 혼란

문재인정부가 대한민국이 그동안 강렬하게 지향해온 가치와 가장 충돌하는 것은 민족가치에 대한 혼란과 훼손이다. 민족의 문명수준을 비약시키며 자유와 민주적 제도를 누릴수 있게 만들고, 민족의 삶을 번영스럽게 만드는 것 외의 다른 민족적 가치란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0년 대한민국 역사는 민족주의의 실현 과정이었다. 다른 한편의 북한에서 문명 파괴와 민족의 삶이 유린되어온 최악의 체제였다는 것은 새삼 거론할 이유조차 없다. 그렇다면 민족가치에 관한 한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에서 민족가치를 실현시켜 온 역사를 존중하고, 희생과 노력에 감사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론 문명파괴와 민족 유린을 만들고 유지시켜온 북한체제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체제질서의 근본적 변화와 노선 변경을 나섰어야 했다.

문재인정부의 민족가치 혼란과 훼손은 김정은이 제시한 ‘민족의 편에 서라’는 것에 대한 정부입장의 부재를 통해서나,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지향했던 3.1운동 100주년을 북한과 함께 기념하자는 어처구니없는 반복 제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김정은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문재인정부에게 ‘민족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의 입장에 서라고 요구했었다. 물론 그것은 북한이 걷고 있는 노선에 동참하라는, 달리 말하면 ‘반민족노선’을 함께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민족이익’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모호한 상태에 있다. 그것은 민족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며, 명백한 반민족을 반민족이라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것은 물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족가치의 방향을 실증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74년간 김일성-정일-정은으로 이어진 전체주의독재는 반민족의 상징이다. 2천 5백만명 우리민족의 기본권 침해와 유린, 삶의 질, 자유와 민주, 민족적 위상,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협력 등 측정가능한 모든 지표와 통계를 보더라도 그보다도 더 반민족적 체제를 찾을 수 없다. 예로서, 세계 빈곤측정기구의 2019년 보고서에서도 나타나듯 북한은 아프리카국가들이 차드, 수단 등과 세계 16위의 절대 빈곤 국가다.²⁾ 아프리카국가 외에는 오직 북한만이 들어가 있고, 주변 동아시아 문명권에서는 찾을 수 없는 반문명적 상황을 초래시켜왔고 최악의 민족유린 체제를 지속

2) 국제 NGO기구인 <World Poverty Clock>(2019)은 하루 1.9달러 이하의 삶을 사는 주민 비중을 기준으로 매년 절대빈곤 상황에 사는 인구비율을 발표하는데 북한은 인구의 38.6%가 기준 이하의 상태로 아프리카의 차드와 콩고 및 르완다 사이에 있다.

시키고 있다. 그 정권은 민족을 대상으로 침략전쟁(6.25)을 벌여 400만 민족의 희생을 초래한 전범(戰犯)정권이며, 수백만에 달하는 민족 살상을 불러올 핵무기 개발과 배치는 물론이고, 울진-삼척과 강릉, 청와대 등 무장침투와 습격 및 아웅산 폭파와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등에 이르기까지 민족 파괴와 살상의 주도자였다.

74년 역사가 보여준 바가 그렇다면, 민족가치를 지향해온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김정은체제를 반민족체제이자 반민족행위라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역사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길이다. 또 그런 반문명 상황을 중단 멈추고, 바로잡자는 것이 모든 국제NGO와 UN같은 국제기구의 일치된 북한에 대한 대응방향이다. 북한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거나, 그것을 밝히지 않는다고 반민족세력이 내부적 폭정을 완화하거나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푸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3.1운동을 반민족적 전체주의인 북한과 함께 기념하자는 제안은 3.1운동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에 반하는 것이다. 3.1정신을 계승 실천한다는 것은 전체주의독재와 반민족적 김정은체제를 중단시키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전체주의독재와 3.1운동을 공동 기념하자는 것은 반민족적 체제를 미화시키거나 그 체제의 성격을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를 향해 호도시키자는 것외에 그 어느 것도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우리민족끼리’ 나 ‘민족의 편에 서라’ 는 것은 곧 반민족적 연대를 함께 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에도 침묵하거나 편승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족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민족문제에 있어서 문재인정부는 역사 평가와 가치 지향은 명백히 거꾸로 향하고 있다. 그런 수많은 예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는 민족에 반하고, 대한민국에 반하는 반국가단체를 만든 주범이자, 6.25침략전쟁의 전범인 김원봉을 미화시키며 훈장 서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노무현대통령이 북한의 고위급 간첩이었던 송두율을 민주화운동자로 미화시키며 그가 우리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포용하고자 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마찬가지로 작년 8.15 기념식에서도 문대통령이 남로당활동을 했던 손혜원 부친 손용우에 대한 직접 서훈을 추진했던 것이나, 평창동계 올림픽에서 ‘태극기’ 를 내리고 ‘한반도기’ 를 올린 것도 상징적 행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아베 일본수상과 펜스(Pence) 미국부통령은 존재감을 없애고 김정은 동생 김여정에게 모든 초점을 맞췄던 것도 북한체제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가치 혼란의 심각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반복된 예들이다.

반민족 세력에 대한 옹호와 두둔은 다른 한편으론 대한민국에서 70여년간 민족가

치를 실현해온 세력에 대한 적대성으로 나타난다. 민족의 가치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가치를 만들어온 세력을 대상으로는 ‘독재자의 후예(後裔)’ 라고 정면으로 공격했던 것이 그것이다. 나아가 ‘적폐 세력’ 혹은 ‘궤멸 대상’ 이라는 썸득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구사한다는 사실이다. 민족가치와 관련된 모든 지표를 보더라도 독재자의 후예이든, 적폐이고 궤멸의 대상이든, 그런 적대적 평가는 김정은체제로 향해야 정당하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역사인식에는 명확히 정반대로 나타난다. 오히려 민족가치를 지켜온 후예들에게 ‘독재와 적폐’ 의 멩에를 씌우고, 다른 한편으론 문명파괴와 민족유린 세력에게는 우호와 미화의 찬사를 보내는 현실이다.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어려운 시절에도 민족 자존심을 지키며 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5월1일 경기장 대통령연설)

누구에게 그런 평가를 했어야 했는가는 명백하다. 그렇다보니 문재인정부는 70년 이상 계속된 문명파괴와 최악의 독재를 종식시키고 우리 민족 2천 5백만에게 광복과 해방을 가져다주겠다는 역사적 과제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일체 상실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정부가 민족가치를 전도시키고 혼란시키는 것은 두가지 목표로 집약된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주도해온 자유보수적 민족세력을 반민족적 세력이자 독재세력으로 규정짓고, 다른 한편으론 ‘친미’ 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본과 협력하는 친일’ 세력으로 연계하고자하는 것임에 명백하다. 집권연장의 방식이 결국은 문명 파괴적 독재를 옹호하고, 민족적 체제를 만들어온 세력에게는 ‘보수 궤멸’ 이나 ‘적폐’ , 혹은 ‘토착 왜구’ 와 같은 표현으로 분노의 대상을 이전시킨다는 것에서 모두 동일한 맥락이다.

우리 민족 전체에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협의 본질이자 반문명적 북한체제를 규탄하고 극복해내는 것을 민족적 과제로 설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전체주의체제에 대한 성격 규정을 호도시키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노력을 회피시키며 시선을 돌려 민족의 가치지향과 분노의 방향을 자유보수와 일본을 포함한 반외세로 향하도록 하는데 민족가치와 관련된 문재인정부의 본질이 있다. 민족가치를 실현해온 세력을 반민족, 적폐라고 규정짓고 분노를 동원시키고, 70년 반민족적 전체주의독재의 해체라는 민족적 과제를 정반대로 실현시키는 현실에 있다. 물론 그것은 실제 세계역사에서 반복되어 왔던바 그대로 집권 강화와 연장을 위한 파시즘적 대중 분노의 동원이란 전형적 방식이기도 하다.

III. 자유민주와 변영의 계승에 반하는 청산 정치

역사청산의 구호는 실패국가에서 나타나는 전매특허이다. 대한민국에는 역사청산보다는 가장 역사의 계승이 강조되어야 할 나라이다. 세계적 성공 역사의 계승으로 성공 모델로 진전시켜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70년사가 만들어낸 자유와 민주, 그리고 변영가치의 구현과정이 그것이고 일관된 역사 과정이었기에 더욱 그렇다. 먼저 자유가치의 실현과정을 보더라도 건국이후 일관되게 성숙되어온 것이지 어떤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비약된 것도 아니다. 김영삼정부에서 없던 자유가 갑자기 노무현정부에서 생겨난 것도, 박근혜정부에서 없던 자유가 문재인정부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다. 그만큼 일관된 것임에도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에 ‘자유’ 사회가 어떻게 정립, 성숙되어 왔는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오히려 헌법전문(憲法前文)에 ‘자유민주 질서’라는 표현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5.18광주정신’을 넣는 것을 시도했던 것에서 보듯, ‘자유’ 가치를 묻거나 대체시키려는데 있다.

대한민국이 확립해온 가장 핵심 가치인 자유를 폄훼하는 것에는 한국 역사에서 보편가치인 자유의 실현 과정보다는 ‘민주’를 중심으로 한 정치구호와 선전을 통한 통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것과 연결된다고 보여진다. 물론 문재인정부가 협력해온 북한이 가장 극단적으로 금기시하는 개념이 ‘자유’ 이기도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는 ‘민주주의’도 허구적 신화를 만들어 대한민국이 지향해온 역사적 정체성을 왜곡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첫째는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建國)이 잘못된 출발이었다는 허구적 신화를 반복하는 것이고, 둘째는 1981년의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한국에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허구적 신화이다.

논란이 될 수 없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건국의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려는 결과가 원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조선 등 한반도를 기반으로 했던 모든 국가들이 갖는 건국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국가 정체성의 토대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민족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세운 나라 중에서 가장 역사적 의의가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건국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에 전혀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잘못된 출범과 정통성 부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나라도 성숙한 체제를 시작부터

출범시키고 이어온 나라는 없다. 영국 민주주의나 프랑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이다. 전 근대적 체제와 제도를 넘어 자유민주체제를 확립하고 성숙시켜나간다는 것은 몇 백 년에 걸친 긴 과정과 절차를 필요로 한다. 국가 질서와 제도의 성숙은 결코 상품처럼 도입하면 정착되는 것이고, 수입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물품 수입하듯 제도도 수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라도 맘먹고 실시하면 되는 것이 자유민주 질서라면 지구상에 그런 질서를 지켜나가지 못할 나라는 없다. 나아가 참정권의 도입과 정착, 의회민주주의의 도입과 정착, 견제와 균형의 사법질서의 정착 등 어느 것 하나하나를 보면 매우 긴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우 혹독한 시행착오와 경험을 필요로 한다.³⁾ 그러나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그런 시행착오와 극단적 경험을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성공적으로 발전시켜낸 나라라는 엄연한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의 대한민국 역사 편찬의 전형적 논리는 70여 년 전인 출범 때부터 훌륭한 수준의 민주주의로 시작되지 못했다는 데 맞춰져 있다. 민주주의가 시작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식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은 전적으로 제도와 질서의 성숙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과거를 공격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늦어진 봉건체제를 탈피하며 근대국가를 지향한 대한제국과 민주공화제를 지향했던 3.1운동을 계승하며 건국을 통해 자주독립된 근대 주권 국가이면서도 봉건 및 식민제도를 극복한 혁명적 자유민주체제의 첫출발이라는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서유럽 대부분 국가와 거의 유사한 시기에 전면적 참정권이 부여되고, 정당 설립과 자유 및 정치 경쟁의 자유와 함께 건국 이래 1960년까지 건국초기 12년 동안 전국 규모로만으로도 16회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선거가 진행되었고, 심지어 6.25전쟁 중에도 대통령선거 포함 3차례 선거가 중단되지 않았던⁴⁾ 자유민주체제의 집착과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1948년 건국체제가 갖는 혁명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부정한다면 그 시기를 뛰어넘어 더 비약적인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가 된 시기는 찾을 수 없다. ‘무고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희생당하고, 죽임당한 것’이라는 문대통령의 인식과 달리,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첫 시작을 좌절시키고자 했던 것이 공산주의자의 제주 4.3사건이었다. 보통선거,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 재산권 보장 등 모든 면에서 1948년 건국 체제는 1981년 광주민주화나 1987년 6.10운동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한반도에

3) 한국 근대화를 파행, 일탈, 왜곡으로 규정하는 성향은 자기 비하적인 것으로 배척되어야 하며, 서구 민주주의도 일사불란한 진행이 아니라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음을 강조하는 대표적 저서는. 강정인, ‘서구 중심주의에 비쳐진 한국의 민주화’, 민주주의의 한국화,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책세상, 2002.

4) 김광동, 4.19와 5.16: 연속된 근대화 혁명, 기파랑, 2017.

살아온 우리민족에게 민주주의의 일대 비약이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그런 시행착오와 경험과정을 반민주와 독재로 규정짓고 청산 대상으로 놓고 있다. 그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광복은 우리가 쟁취한 것’ 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바깥에서 주어진 것’ 을 5.18-6.10-촛불혁명 등으로 싸워 이뤄낸 것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다.⁵⁾

-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 (8.15 경축식 연설)

-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은 해방과 함께 함께 바깥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6.10민주항쟁 기념식 연설)

문재인정부는 건국과정과 반공투쟁을 통해 만들고 지켜진 피와 희생의 민주주의는 다 건너뛰고 독립운동과 5.18-6.10만을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거론한다. 5.18과 6.10운동을 통치 정당성의 신화로 만들다보니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해와 계승은 전혀 없다. 온 민족과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고 확인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굳이 의도적으로 부정하며 건국은 1919년으로 규정짓고 건국을 수정하고자 했던 것도 그런 맥락이다. 소위 ‘자유민주’ 세력 혹은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자유민주체제를 주도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또 민주주의는 안보체제 확립과 경제 번영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을 위협하던 공산권의 해체와 중국의 개방 등 냉전 완화의 연장선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⁶⁾

문재인정부는 잘못된 건국과 잘못된 독재정부가 연속되다가 비로소 그들이 말하는 소위 ‘민주화세력’ 의 등장으로 민주주의가 도래했다는 허구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 착종된 인식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것이 헌법개정의 추진이고 ‘5.18 정신’ 을 헌법 전문(前文)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5.18정신이나 광주정신이 무엇을 의미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어떤 측면에서 비약한 것인지를 밝히지 않는다. 오히려 문대통령이 스스로 반체제 지하당인 통일혁명당(統革黨)을 주도했던 신영복을 존경하다고 밝히고, 대통령이 반체제 불법단체 사회주의노동자연맹(社勞盟)의 주역이던 박노해의 시(詩)로 연하장을 보내는 현실을 보면 5.18도 자유민주 질

5) 문재인대통령 연설문 자료집(상/하권)

6) 김광동, ‘한국 민주주의 기원과 혁명, 그리고 성장: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재구성, <제도와 경제>(통권 3호), 2008.

서를 부정하며 무장봉기에 의한 계급혁명을 지향했다는 취지에 동의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사노맹의 박노해 등은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하여 ‘계급투쟁’ 이자, ‘무장봉기’ 적 프롤레타리아 혁명투쟁이라고 밝혀왔던 인사였기에 문재인정부의 5.18에 대한 역사인식부터 정립해야 한다.⁷⁾

문재인정부는 5.18과 6.10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자랑스럽게 계승하겠다는 것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로 보면 공산주의와 싸운 투쟁이야말로 위대한 민주주의투쟁이었고, 가장 처참했고, 희생도 가장 컸다. 그 결과로 오늘의 민주주의도 가능했다. 반공(反共)투쟁이 갖는 민주주의 투쟁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기에 계승의 역사를 부정하고 단절과 청산 역사를 만들게 된다. 부정과 단절은 청산(清算) 역사로 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청산해야 할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않았음에도 역사청산을 거론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만들어 왔다. 더구나 역사에 대한 평가는 결코 임기가 한정된 특정 정부에게 맡겨진 것도 아니다. 제한된 임기의 정부는 역사 청산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전임정부를 계승하여 보다 더 번영시키고, 발전시킬 과제가 주어졌을 뿐이다. 그럼에도 ‘촛불혁명’ 정부를 운운하며 ‘과거사 정리’와 ‘역사 청산’에 몰두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역사를 허무는 것이고, 주어진 정부과제에도 반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전임 정부시대를 ‘불의(不義)의 시대’라고 규정짓고 수천 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며 ‘역사 청산의 대상’이라고 강조해왔다. 스스로를 선과 도덕의 판단자로 규정짓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은 논법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대한민국의 특정 역사만을 선택적으로 계승하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 당대표는 “조선시대 정조(正祖) 이후 개혁민주 정부가 없었고 모두 극우세력이었다”는 반복된 논리도 그런 대표적인 예이다. 실패한 체제인 조선의 정조시대가 대표적인 개혁정부였고, 그 이후 민주개혁정부가 없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함 모독이자, 자유민주의 확립과 번영국가의 확립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자유민주 가치의 정착과 대한민국의 번영은 오히려 봉건적이고도 이분법적 인식에 입각한 권력중심 정치가 종식되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조시대를 말하고 있으나, 그 이전의 숙종이나 그 이후의 순조나 다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 건국이후에 혁명적으로 도입되고, 정착된 것이다. 숙종이든, 정조시대가든 중국의 속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나, 자유무역과 문명교류를 금하며 근대문명과 담을 쌓은 것이나, 인구 절반에 가까운 같은 민족을 노비로 삼는 계급적 신분구조나, 사농공상(士農工商)에 대한 극심한 신분차별과 직

7) 박노해, ‘광주 무장봉기의 지도자 윤상원 평전, <노동해방문학> 5, 1989.

업차별을 유지한 것이 모두 동일했다.

우리 민족의 문학작품 <춘향전>을 보면 권력중심 사회의 본질이 드러난다. 숙종 때 남원지방을 배경으로 한 춘향전의 제1막은 고을 사또의 아들과 춘향의 사랑과 동부승지가 되어 떠나며 발생한 이별이며, 제2막은 새로 부임한 남원부사의 강요, 핍박을 춘향이 버터내는 것이며, 제3막은 더 큰 벼슬인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에 의해 해결된 변학도 징계와 춘향과의 재회이다. 문학적 우수성과 별개로 권력중심 사회의 본질은 사랑의 계기도 권력인 사또 아들이란 신분이며, 춘향에 대한 핍박도 신임 사또 권력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춘향을 구원하고 사랑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더 높은 권력(암행어사)의 힘으로 가능했다. 결국 전근대 봉건사회의 신분, 감투, 완장, 계급적 권력의 요소가 모든 것을 좌우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번영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춘향전>적 권력중심 사회를 극복해낸 결과이다. 정치권력으로 좌우되는 봉건체제, 군국체제 및 공산독재체제의 극복이었다. 일원적 권력중심 구조가 종식되고 대한민국에 개방사회, 신분해체, 개인의 중심, 남녀평등, 직업귀천의 소멸, 생산과 기업중심 사회, 개방과 자유선택의 사회 등으로 진전되고 성숙되어 온 것이다. 권력과 정치중심이 아니라, 오직 노력하고 땀 흘린 사람들이 그 댓가를 받는 사회를 정착시켜왔다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의 본질이다. 권력(士)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시대를 극복하고 ‘상공농(商工農)’의 시대를 정착시킨 결과이다. 그것은 재산권 보장은 물론, 직업과 종교자유, 법치주의, 혹은 남녀평등 등 모든 개별 요소들의 총합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조는 해냈는데, 그 이후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건국과 건국 이후는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소위 ‘민주세력’이 등장해 바로 세운 역사도 아니다. 독재시대가 계속되다 5.18과 6.10에 의해 비로소 민주시대가 열린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일관된 역사과정의 축적물이지만, 결코 특정 사건으로 비약되지도, 특정 인사에 의해 좌우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서 성공한 이승만-박정희는 동상하나 없이 비난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실패체제의 상징인 체 게바라(Che Guevara)는 한국의 각종 문화센터, 도서관, 공연장에서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존중되는 현실에 있다. 쿠바와 베네주엘라가 옹호되고, 체 게바라를 존경하는 역사적 지향점에서 대한민국 내일은 매우 명확한 것이다. 건설적 계승으로 가지 않는 세력의 전형적인 정당화 논리는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과거 비판’과 ‘과거 부정’ 방식을 통한 자기 정당화이다. 과거를 비판하기는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하고 생산해내는 것은 어렵다. 지어놓은 건물을 논평하며 비판하기는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절적 역사인식과 선악(善惡)적 이분법 구분에 따른 청산 정치는 진행되는 현재의 역사만을 황폐하게 만들 뿐이다. 더구나 그런 논법이 스스

로의 정당성의 통치와 집권의 신화를 만들 목적인 것이라면 더욱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이다.

IV. 보편가치에 입각한 국제연대의 균열

역사의 성취는 보편가치를 함께 하는 문명권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가 누구였더라도 공산주의 소련이나 루마니아, 혹은 봉건적 북한에서 아무리 힘겹게 노동하고 열심히 살고자 했더라도 그 한계는 분명했다. 역사적 질서가 정립되지 않은 체제에서는 모두가 제약받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 및 민족가치와 번영의 지향이라는 기본방향과 반봉건-반식민-반공산의 길을 일관되게 계승하지 않는 문재인정부의 역사 정체성의 일탈은 대한민국의 성공 역사의 방향을 혼돈과 후퇴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대통령은 일본의 만행에 대해, 특히 5.18광주에서의 희생에 대해 매우 선동적 연설과 함께 일방적인 역사인식을 보여주곤 하였다. 문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철저히 고립된 광주’,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 ‘학살당하는 광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했다는 깊은 부채의식’으로 남아있다고 했다(2018.5.18). 그러면서 ‘지체된 정치의식’의 잔존 때문에 광주정신은 아직 헌법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 안타까움이라고 하였다. 광주정신에 대한 집착도 집착이지만, 문제는 그런 문제인식을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채의식’, ‘지체된 정치의식’을 못 느끼는 것에 있다. 가장 현존하는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문제를 거론하고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 마치 우리민족에게 공산독재와 전체주의 폭정문제는 마치 이미 종결된 문제로 보게 만들고 있다.

광주에서 했던 그런 표현들은 북한에 살고 있는 2천 5백만의 우리 민족을 향해 표현되는 것이 맞다. “철저히 고립된 북한”, “외롭게 죽어가는 민족”, “무차별적 학살 처형당하는 민족”이 있음에도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거론했어야 했다. 북에서 죽어가는 민족을 방치하는 것이 바로 ‘독재자의 후예’들이 하는 것이다. ‘지체된 정치의식’이 낳은 결과이다. 그런 역사적 과제는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감추는 것이다. 특히 누구와, 무엇을 함께 할 것이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대한민국 자주독립과정에서 미국의 희생과 역할은 지워져있고, 지난 70년 이상 확인된 북한과 중국의 행위는 포용하면서도, 일본에 대한 지난 2년간의 적대적 인식을 보면 문재인정부가 보편가치에 입각한 국제 연대를 지향하는가를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항일(抗日)’을 가장 의미 있는 것처럼 만들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해방과 광복과정에서 한 미국의 역할과 희생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는다. 오늘의 대한민국 해방과 독립을 가능하게 한 항일(抗日)투쟁을 말한다면 그것의 거의 98% 이상은 미국이 수행한 것이다. 일본군은 1941년 시점에 212만 명의 상비군과 9개의 항공모함을 유지했던 나라다. 1945년 시점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640만 명 대군을 운용하며 미국, 영국, 중국 국민당군 등과 태평양전쟁을 벌였다. 일본군은 무려 175만 명이 사망하고 본토가 공습 받고 핵폭탄이 떨어질 때까지 결사 항전했다.⁸⁾ 일본 군국주의의 패배와 대한민국의 독립 및 동아시아전역의 해방은 미군에 의한 태평양전쟁의 승리 결과였다. 우리의 독립운동도 고귀한 것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패망시키는 과정에서 항일전선 그 어디에서도 중대규모의 전투조차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심지어 소련 스탈린군도 원자폭탄 투하 이후, 일본이 무조건 항복의사를 전달했던 종전 8일을 앞둔 1945년 8월 9일 참전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해방과 광복을 만든 제2차 대전도 그렇지만, 공산전체주의의 침략에 맞서 격퇴시켜낸 6.25전쟁도 마찬가지로 자유와 민주를 지향하는 국제적 동맹과 연대의 결과였다. 물론 그 이후의 번영체제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마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독립된 것처럼 역사인식의 혼란을 만들어 함께 했던 보편가치를 함께 했던 동맹국의 헌신과 동맹체제의 중요성을 상실시키고 있다. 오히려 누구에 의해, 어떤 독립을 가져온 것인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있는 지를 망각시킨다. 예를 들면, 6.25 침략전쟁의 본류를 형성시켰던 조선의용대(군)와 반민족적 전범(戰犯) 김원봉으로 역사 정체성을 호도시키는 것도 그것이다. 국군의 뿌리이고 한미동맹의 토대라는 것도 역사인식의 도착이다. 그런 방식은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이 해방 독립되고 공산주의가 가지 않게 되는 투쟁에서 엄연했던 미국의 역할과 희생을 호도하는 것이고, 보편가치를 함께 지향하는 나라들과 함께 해야 할 관계를 허무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문명유린적 전체주의가 온존되게 만들어온 가장 큰 지원자는 물론 중국 공산당이다. 중국공산당 정부는 6.25 침략의 주도자이면서도 한반도 자유통일을 막아낸 본산이다. 지금도 중국 공산당정부는 6.25전쟁을 북한 침략이 아니라 ‘내전(內戰)’ 이고 미국과 유엔군 지원은 침략(侵略)이었고 중국군의 참전은 침략자에 대한 ‘정의 전쟁(正義 戰爭)’ 이라며 공식화하고 있다.⁹⁾ 중국은 유엔 총회결의에서도 침략으로 규정했음에도,¹⁰⁾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문제 등과 달

8) 吉田 裕, 森茂樹, 아시아-태평양전쟁, 吉川弘文館, 東京, 2014.

9) 中國 近代史 綱要, 高等教育出版社, 2018.; 中國 近現代史, 人民教育出版社, 北京, 2018.

10) 유엔(UN) 안보리 결의 82호는 중국 행위를 평화파괴(breach of the peace)이자 무력공격(armed

리 중국에 대해 일체의 항의나 수정요구를 않고 있다. 물론 중국의 6.25침략 및 서울침략을 감추기에 급급하다. 오직 일본을 대상으로만 역사왜곡 항의만을 반복하는데 머물고 있고, 오히려 종전선언을 추진하여 침략자로 규정된 북한과 중국의 책임을 면제하고, 침략에 맞서 평화유지 기능을 맡고 있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 18개국으로 결성된 유엔군(UN Command)을 해체시키고자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다른 사안을 보더라도 문재인정부는 2017년 12월 중국 방문시 소위 ‘3不 합의’를 했다. 미국과 미사일방어(MD)를 함께하지 않으며, 사드(THAAD)배치를 하지 않고, 일본과는 군사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주권을 가진 국가가 할 수 없는 일방적 굴욕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관련된 사안은 굴욕으로 여기지 않는다. 굴욕적 합의 이후에도 한 번의 만찬 외에 전부 소위 ‘혼밥’으로 일관된 냉대와 수행기사들에 대한 무차별 폭행의 굴욕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대응은 없었고 사실관계를 숨기기에 바빴다. 나아가 중국이 공개한 ‘2019 국방백서’에 명시된 대로 ‘한국의 사드배치는 중국 안보이익의 훼손’이라는 입장에도 항의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과 관련된 국익과 보편가치의 방향과는 달리 ‘항일’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가적 의제에서 사라지는 현상에 있다.

반일(反日)은 보편가치도 아니고, 민족가치가 될 수 없음에도 문재인정부는 지난 2년간 반일을 대한민국의 역사정체성으로 만들어 왔다. 항일이란은 대한민국 출범 이전인 1945년 해방까지 적용되는 제한적인 것이고, 1965년 국교정상화를 통해 국가관계는 완전히 바뀐 것임에도 반일에 전념해왔다. 더구나 북한 독재체제가 항일이란 거짓 신화를 기반으로 반민족적 전체주의를 유지시키는데 이용되고 있기에 매우 분별력 있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항일은 반외세(反外勢)적 동원체제를 만드는 기반이었다. 북한 독재는 1866년 통상요구를 하며 대동강에 진입한 제너럴서먼호를 불태워 살해한 반외세투쟁을 근대의 기점으로 잡고, 중국 공산당정부도 1839년 임칙서(林則徐)가 광동 호문(虎門)에서 영국배의 아편무역을 금지시킨 것을 근대의 기점으로 만들어왔다. 독재체제의 반외세 신화는 곧 권력의 정당성의 기반이었다.¹¹⁾

군국주의가 해체된 일본은 1945년 이후 지난 74년간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위협하거나 무기로 공격하지 않았다. 항일은 1945년 이전 식민지배와 군국주의에 대한 규탄인 것이다. 모든 문제는 국익에 따른 사안별 대응이어야지, 전후 혹은 국교수립 이후의 일본을 대상으로 한 반일(反日) 정체성을 만드는 것은 성립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일본은 미국과 함께 명백히 지난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성장과

attack)이라 규정했고, 유엔 총회 결의 제498호도 침략(aggression)으로 규정지은 바 있다.

11) 현대조선역사, 사회과학원, 1983; 중국근현대사, 인민교육출판사, 2018.

발전에 기여해온 나라이고 협력자였다. 대한민국 출범이후 전 역사를 보면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에게 한 것과 비교할 때 차원이 달랐던 파트너였음은 부정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공산주의 독재적 정부인 북한과 중국이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의 독재 유지적 차원에서 만들어낸 반외세(反外勢) 차원의 항일 논리를 이어받아 공조하는 것이다.

정부가 확고히 대응해야 할 것은 우리 민족과 국가에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집중이다. 그 대부분은 북한이란 봉건 전체주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의도적으로 반민족적 봉건독재를 두둔, 미화하고, 다른 한편으론 국민 분노를 일본을 향하도록 만들어왔다. 수백만 민족 대학살로 연계될 북한 핵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과 반도체 제품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때는 거론 않던 ‘죽창가(竹槍歌)’와 ‘의병(義兵)’ 운동을 거론하고, ‘침략’이란 표현의 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달리, 사드배치 반대에 따른 중국 수입규제와 롯데 등 한국기업에 대한 유린, 혹은 지난 3년간 단 한편의 한국 영화조차 상영되지 못하게 막아온 중국에 대한 대응과의 차이를 보면 반일과 대비된 친북 및 친중 정체성의 대비는 명확하다.

V. 결론

대한민국 국호와 태극기라는 상징으로 구현해온 역사는 근현대 역사에서의 세계의 모범이자 모델이다. 반봉건, 반식민, 반공산을 확고히 하며 자유, 민주, 민족, 번영이란 보편가치와 민족가치 구현을 일관되게 이뤄온 과정이었다. 그 역사과정에서 없을수 없던 당연한 시행착오와 경험 부족 문제로 발생한 사안들로 빛나는 역사가 흐려질 수준도 결코 아니다. 따라서 ‘민주’ ‘평화’ ‘통일’ ‘반일’ 등 그 어떤 화려한 수사와 도덕적 이분법으로 치장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70년 이상 일관된 민족가치와 보편가치 구현이라는 역사 정체성의 연속선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치적 선동이자 역사에 반하는 전체주의 혹은 독재세력에 편승, 동조하는 행위일 뿐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걸어온 성공의 길은 물론 민족가치의 실현과도 충돌되는 것으로 민족과 국가의 통합을 저해시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축적된 경험에 입각한 국제연대를 지켜가지 못하고 반일에 몰두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본질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스스로 언급했던바 그대로, ‘부채의식’ 과 ‘지체된 정치의식’ 의 소산이다. 본질적으론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길을 걷는 세력에 대한 강한 부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역설적 인식, 모택동 및 신영복과 박노해에 대한 헌사, 의병과 죽창으로 대변하는 저항 의식과 반침략투쟁 등에서 보여지듯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걷다 ‘변질’ 내지 ‘수정’ 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부채의식이 정부행위를 오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정 정체성으로부터의 일탈은 물론 보편가치와 민족가치로부터의 일탈이다. 조선, 공산주의 및 항일을 넘어 세계문명사와 보편가치적 제도의 실현, 그리고 대한민국 민족변영사에 대한 재정립 없이는 ‘배반자’ 혹은 ‘수정주의’ 라는 지탄에 걸나서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수준에 있다. 특히, 제주 4.3, 광주5.18, 6.10항쟁 등 몇 개의 사건만을 편집하여 대중적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를 통해 정치적 지지를 유지, 강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시즘적 역사인식에 가깝다.

그런 역사인식에 기반한 문재인정부는 결코 생산적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 자유민주 질서의 성숙과 변영국가의 지향보다는 파편적 인식체계를 조합하여 대중 인식을 왜곡시키고, 분노를 불러일으켜 대한민국이 지향해온 가치와 보편가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민족이 당면한 전체주의독재에 맞서기는커녕 오히려 두둔하고, 대신 반일감정으로 재편하려는 것에 맞춰져 있기도 하다. 반외세투쟁, 특히 한국에서는 반일, 경우에 따라서는 반미로 나아가거나 궁극적으로 반미를 염두해둔 반외세투쟁이 내재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론, 자유변영적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경쟁과 공존보다는 ‘적폐’, ‘궤멸’, ‘촛불혁명’, ‘친일’ 등의 규정에서 나타나듯 장기적 정치 독점을 위해 정치적 경쟁의 위치에 있는 세력을 적이자, 증오 대상으로 만드는 배타적 정치를 지향하는 역사 정체성이기도 하다.

70년 이상 입증된 성공 역사를 계승하고 보편가치에 입각한 역사 정체성을 확고히 계승하는 것이 곧 국가와 국민의 자산이다. 헌법적으로는 국가의 계속성(헌법 제66조)을 통해 반영되는바 그대로,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가독립, 영토보전과 함께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을 수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김정은체제의 반민족행위를 반민족이라 명확하게 정립하고 허구적 부채의식과 지체된 역사인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 대신 대한민국이 걸어온 일관된 반봉건-반식민-반공산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보편가치와 민족가치를 구현해온 것을 계승해야 한다.

덧붙인다면, 한국의 보수정당도 정도의 차이일 뿐 역사 정체성의 혼란과 비일관성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 이명박대통령이 2011년 8월, 기습적 독도방문으로 지지도를 끌어올리려했던 것이나, 박근혜대통령이 2015년 9월, 항일 주체도 아니었던 공산당정부가 주최한 ‘항일전승기념식’에 가 전 세계 독재자들 사이에 서있었던

것들은 모두 대한민국 역사정체성의 본질과 크게 어긋난 것들이다. 일관된 가치를 지향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잘못된 방향을 조장하거나 편승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그런 수준으로는 북과 남 모두에서 역사를 오도하며 권력중심 사회를 만들고 그 속에서 따리를 틀고자 하는 세력을 압도해낼 수 없다.(끝)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발 제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반과 전개

김 영 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토론회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반과 전개

김 영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국가형태와 정치체제

대한민국은 근대국민국가이다. 역사상 등장한 국가형태는 도시국가, 왕조국가, 제국, 절대주의국가 등 다양하다. 대한민국은 왕조주권을 그 원리로 했던 조선왕조에서 식민지를 거쳐 국민주권을 국가구성원리로 하는 근대국가로 탄생했다. 그 근대국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배 이념으로 갖고 있다. 국가형태와 정치체제의 구분과 이해는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반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정치체제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라를 세운다’ 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국’ 은 정치학적으로 특정 지역 내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 특정의 정치질서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왕조의 건국은 한반도에 사는 주민들에게 유교이념에 기초한 신분제적 왕조체제를 탄생시켰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권리를 가진 개인들을 상징적 존재로서 ‘국민’ 으로 재탄생시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부여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근대국가 형태이면서 그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갖고 있다.

지배자의 숫자에 따라서 정치체제를 나눈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적 관념에서 벗어나 최고 권력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장 보댕은 정치체제를 분류했다. 보댕의 주권 개념은 최고성, 영구성, 비분할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절대주의국가에 정치적 명분을 부여한 보댕에게 근대국가의 구성 원리로서 주권의 소유와 행사가 분리되는 근대국가적 국민주권론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국민주권론은 종족적 의미의 ‘민족’ 을 ‘정치적 민족’ 인 ‘국민’ 으로 재탄생시킨 프랑스혁명을 통해서 현실화되었다. 프랑스혁명을 통해 등장한 민족주의는 신분제를 타파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권리를 가지 개인을 탄생시켰다. 식민지시대 ‘저항적 민족주의’ 단계를 거쳐 건국과 함께 ‘종족적 민족’ 은 ‘국민’ 으로 거듭났다. 제헌헌법 전문은 그 첫 문장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 이라고 엄숙하게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대한국민’ 은 종족적 민족이 근대적 의미의 ‘정치적 민족’ 인 ‘국민’ 으로 재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이념에 대한 오해와 선동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 사회에는 건국 이후에도 ‘종족적 민족 관념’ 이 강

하게 남아 있다.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 민족끼리’ 는 바로 ‘종족적 민족 관념’ 을 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이용한 전복전의 전형적 사례이다.

‘종족적 민족’ 은 어떤 정치체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민족을 정치적 민족인 국민으로 전환시키지 않을 경우 종족적 민족 위에는 북한처럼 전체주의체제가 들어앉는 것이다. 미군정은 이 전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1948년 5·10선거가 실시되기 직전 4월에 ‘한국인을 위한 권리장전’ 을 발표하여 한국인이 자유와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군정의 권리장전 선포와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보면 상징적 존재로서 ‘국민’ 의 탄생이 근대국가 등장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흔히 국가형태와 정치체제의 변동을 논의할 때 권력 상층부의 변화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배자가 왕에서 대통령과 수상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은 지배층의 변화 뿐만 아니라 그 국가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원들도 완전히 새롭게 옷을 갈아 입고 새로운 ‘국민’ 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족적 민족주의’ 라고 하는 민족이데올로기가 아직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념적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이념: 자유민주주의

근대국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체계적으로 답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사랑과 날씨처럼 느끼기는 쉽지만 막상 설명하기는 어렵다. 한국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이승만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건국 주체세력에 의해 서양에서 도입되어 한국적 현실에 맞게 정착된 사상이다. <<한국, 한국인>>이라는 책에서 마이클 브린은 한국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서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이념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유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의 주장이 공감을 얻는 이유는 한국의 전통사상은 정치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전제왕정이고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교과서 집필 기준을 발표하면서 ‘자유’ 를 빼 ‘민주주의’ 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했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를 빼면 그 민주주의가 ‘민중민주주의’ 인지 ‘인민민주주의’ 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라고 정확하게 명기를 하고 그 핵심 원리들을 자라나는 세대

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옳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크게 다섯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최우선적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 우리는 이것을 ‘천부인권’ (天賦人權)이라고 부른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이런 권리들에는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 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런 권리를 가진 인간을 ‘개인’ 이라고 부른다. 자유민주주의는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바로 그 권리의 주체이다. 개인은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이런 권리들을 갖고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존재 이유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원리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는 입헌주의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입헌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헌법에 명문화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국가의 헌법이 ‘기본권’ 조항에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전문과 총강에 이어서 바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라는 기본권 조항이 나온다.

그러나 이 조항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개인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언제든 폭정(tyranny)으로 바뀔 수 있다. 미국 <<연방주의자 논고>>에서 제임스 매디슨은 “만약 인간이 천사라고 한다면, 국가는 필요 없을 것이다. 만약 천사가 국가를 지배한다면, 국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장치는 필요 없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의 주장을 다시 설명하면 인간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다. 천사가 국가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지배자와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입헌주의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를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로 나누고 있다. 이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입헌주의이고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원리를 구성한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사회(civil society)라고 하는 자율적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민사회의 존재는 개인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사적 영역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큰 원 안에 작은 동심원을 그려보자. 안에 있는 작은 동심원이 국가라고 한다면 그 원과 밖에 있는 큰 원 사이에 존재하는 그 영역이 시민사회이다. 이 영역이 바로 개인의 종교와 경제 활동, 친목단체와 교육 활동 등 다

양한 개인의 자율적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다. 이 공간이 국가에 의해서 압살될 경우 그 체제는 북한과 같이 전체주의로 타락하고 만다.

서양에서 종교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은 종교를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피비린내 나는 내전과 종교전쟁을 불러온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종교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개인의 독립된 사적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나긴 투쟁 과정에서 탄생한 정치사상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국교가 존재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다.

개인의 사적 영역은 종교를 넘어서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자유의 보장, 자유로운 시장경제활동의 보장, 다양한 이익단체의 결성 등으로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되면서 오늘날처럼 성숙한 ‘시민사회’의 모습이 형성되게 되었다. 건국 직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매우 취약했지만 산업화와 경제발전과 함께 국가로부터 독립된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법치주의이다. 이것은 인간이 남녀, 종교, 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원리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마음대로 하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다. 권리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권리의 평등성은 법치주의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 위에서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브린은 한국의 법치주의는 ‘국민정서법’에 의해서 종종 침해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국민정서’라고 하는 괴물을 감옥에 가두지 않는 한 한국에서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의 비판에 한국인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유민주주의 중요한 원리는 국민주권론과 대의제 민주주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론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주권론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에서 처음 제시된 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원리로 자리 잡았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국민은 주권자이지만 그 권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 위의 헌법 규정에서 말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의 의미는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대표를 뽑아서 일정 기간 국정 운영을 맡기는 것이다. 우

리의 경우 대통령은 전국구 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 대표인 것이다.

클로드 르포르가 주장하는 것처럼 왕조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왕이 떠나버린 ‘빈 자리’에 왕을 대신해서 ‘국민’이라는 상징적 존재가 그 자리를 메우게 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 그 ‘빈 자리’에 5천만이 모두 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대표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그 ‘빈 자리’에 앉아서 통치를 하게 하는 것이다.

북한처럼 그 ‘빈 자리’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앉았다가 김정은으로 세습되어 김씨 일가가 영구히 그 ‘빈 자리’를 차지하는 정체체제는 전체주의체제로 타락하는 것이다. 전체주의체제 하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소멸되고 만다. 김씨 가문의 지배를 받는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을 빼고 모두 평등하다. 그것은 ‘노예 속의 평등’일 뿐이다.

이와 달리 자유민주주의는 왕이 떠나버린 그 ‘빈 자리’를 항상 비워두고 복수의 정당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 경쟁이 바로 ‘정치’인 것이고, 그 정치는 대의제 민주주의로 수렴된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제도화시킴으로써 개인들은 ‘자유 속의 평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직접민주주의를 못하기 때문에 편의상 채택된 제도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직접민주주의는 좋고 대의제 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로서 나쁘다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는 노예의 존재에서 보는 것처럼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원리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국민의 대표자들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사욕을 채우고 당파 싸움에 골몰하는 타락한 정치현실을 볼 때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자유민주주의체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

국민들은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표들을 교체해나가고 항상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상의 다섯 가지 자유민주주의 원리들과 함께 우리가 놓쳐서 안되는 중요한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활양식의 문제라는 점이다. 자유 없는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체제 하에서 사는 것과 ‘자유 속의 평등’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사는 것은 생활양식의 측면에서 볼 때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기반한 통일한국을 추구하는 것은 북한 동포들도 우리처럼 자유와 인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원리들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전체주의체제 비판

북한 정치체제를 흔히 ‘봉건왕조국가’ 혹은 ‘세습체제’로 부르는 경우를 본다. 이것은 그 체제를 피상적으로 묘사한 것일 뿐 그 본질을 제대로 설명해주시 못한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왕조국가는 없다. 한국과 북한 모두 산업사회를 그 배경으로 탄생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전체주의체제’이다. 최근 중국 화웨이와 북한 정권 커넥션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은 중국처럼 ‘디지털 전체주의’로 발전하고 있다.

전체주의는 서양에서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하에서 경험한 체제이다. 북한 전체주의의 특징은 서양 전체주의체제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둘 사이의 ‘편차’(variations)이 북한 체제의 특징이다.

서구에서 등장한 히틀러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은 기존의 독재정치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그 자체로서 독특한 전체주의체제로 분류된다.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에서 전체주의의 특징으로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유일 정당의 존재, 2)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official ideology)의 존재, 3) 이 이데올로기 강요를 위한 폭력과 선전 수단의 국가 독점, 4) 반체제 인사에 대한 테러와 공포정치, 5) 국가에 의한 통제경제체제 운용.

아롱의 정의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정권은 전체주의로서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북한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에 의해서 지배되는 ‘당통제국가’(party state)이다. 노동당 규약은 남한의 적화를 그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 70년 동안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복전략을 펴고 있다. 이런 북한의 전복전략에 주목하여 그 체제를 ‘혁명적 전체주의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고, 이를 어린 시절부터 모든 주민에게 강제로 주입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선전과 선동 수단을 국가가 장

약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보는 ‘언론’은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치범수용소에 가두고 있다. 북한에는 6개 정치범수용소에 약10여명의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워싱턴 소재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발행한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인공위성 사진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소련의 굴락과 같이 반체제 인사를 수용하고 테러를 가하는 범죄가 북한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경제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라고 하지만 경제학자들의 지적처럼 지금 북한의 경제 현실을 보면 경제가 국가의 계획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파탄상태로 이르고 있다. 이런 계획경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가가 경제를 완전히 장악한 통제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경제체제는 선군정치라는 미명하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민간경제를 희생하고 국가 자원을 군사비 지출에 집중해야 하는 사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서구와 북한의 전체주의체제는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되는 중요한 것은 서구 전체주의는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산업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생산성이 증대되고 이에 상응하여 사회제도와 생산방식과 생활양식이 변화해가는 사회를 일컫는다.

이 과정에서 경제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 군사력의 증강과 전쟁 양태의 변화도 수반된다. 이와 함께 국가권력의 중앙집권화가 가속화되고 국가 지배기구도 확대·강화되어 나간다.

이런 산업사회를 기반으로 등장한 정치체제가 헌정주의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국가가 개인과 시민사회를 압도하는 전체주의체제로 타락해 간다. 북한은 서구의 전체주의체제와 마찬가지로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과거 독재정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국가보위부와 같은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 체제를 남한은 자본주의이고,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식으로 경제적 범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북한 체제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같은 ‘경제양식’(economic mode)에 초점을 맞출 경우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전체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양식’(political mode)가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현실의 일식현실’이 생겨난다. 북한 체제의 전체주의적 속성이 흐려지지 않도록 정치적 범주로서 남북한 체제를 비교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관계를 혈연과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남북한 정치체제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북한 선전기관들이

‘민족공조론’ 과 ‘우리민족끼리’ 를 내세우는 것은 북한 전체주의체제의 속성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는 절대로 융합될 수 없는 적대관계에 있는 체제이다.

그런데도 ‘민족’ 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두 체제가 화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정치체제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직시함으로써 ‘민족공조론’ 이라고 하는 북한의 선전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정치체제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통일은 종족적 민족의 통일이 아니라 북한 전체주의체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변화시켜 북한 동포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이다. 북한 전체주의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이 ‘민족 문제’ 가 아니라 ‘정치체제 통일’ 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흔들리는 대한민국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건국과 호국과 산업화를 통해 구축된 국가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을 보면 기본권 주체를 일부 조항에서 ‘국민’ 에서 ‘사람’ 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 기본권 주체 확대와 관련한 청와대의 설명을 보면 우리 사회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인권 수준의 기대에 부응하고 외국인 200만명 시대에 걸맞게 헌법 일부 조항의 ‘국민’ 을 ‘사람’ 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대한민국을 마치 ‘자선사업국가’ (慈善事業國家)로 바꾸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에 대해서 그 주체를 ‘국민’ 에서 ‘사람’ 으로 확대한다는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설명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정학의 기초조차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방부가 발간한 ‘2018년 국방백서’ 에서 ‘북한=주적’ 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다. 그 대신 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라고 적시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한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 이번 국방백서는 군사전략의 기초를 깎그리 무시하고 있다. 모든 나라는 국력과 군사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정 국가가 처해 있는 여건을 평가하고 그 여건에서 생

겨나는 위협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략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 여건을 무시하고 “모든 세력이 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국력의 한계를 무시한 비현실적이고 과대망상적인 사고이다.

주적을 적시하지 않고 미래에 다가올 적을 모두 적이라고 상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군사작전계획을 마련하고 평시에 군사대비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엄연히 북한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존적 적’ 인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민족끼리’ 라는 종족적 민족주의적 사고가 칼 슈미트가 말하는 ‘우적관계’ 에 대한 인식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이념은 종족이 아니라 개인으로 탈바꿈한 국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남북한 정치체제 차이점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이 유엔에 의해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합법정부’ 라고 인정받은 내용을 역사교과서에서 뺏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조약의 기반을 송두리째 허물고 있다.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합법정부’ 로 승인한 것은 한국이 전민족을 대표하는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反)통일적 행태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3조를 보면 일본이 조약을 체결하는 대한민국은 유엔결의안 195(III)에 의해 인정된 국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유일합법정부’ 를 부정하는 문재인정부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외국과 체결한 조약의 기반을 언제든지 허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일경제 갈등이 표면화된 이후 문재인대통령은 전라남도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 ‘난세’ 를 이기는 힘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다” 고 국민을 향해 반일(反日)을 선동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평범한 사람들’ 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가 이 용어를 쓴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5월 독일 일간지와 서면 인터뷰에서도 이 용어를 쓰고 있다. 앞의 대한민국 건국이념 논의 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통령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 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평범한 사람들’ 과 ‘평범하지 않을 사람들’ 을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분열시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평범한 사람들’ 이란 과거 운동권에서 말하던 ‘민중’ 이라는 말을 상기시킨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한민국 이념과 국가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례들은 이상의 것들 외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1787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헌법제정회의가 끝나고 나서 한 여성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우리는 왕정을 갖는 것인가 아니면 공화국을 갖는 것인가” 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의 답은 “공화국이지만, 미국인

들이 그 공화국을 지킬 수 있다면” 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승만박사 중심의 대한
민국 건국 주체세력이 세운 근대국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그 후손들이
건국이념을 되새기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을 때만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발 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누구인가

이 선 민 조선일보 선임기자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토론회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누구인가

이 선민

조선일보 선임기자

1. 들어가는 말

한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우러러 존경하면서 국민 통합과 정체성의 중심이 되는 ‘나라의 뿌리’가 필요하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입헌 왕조 국가에서는 국왕이나 왕실이 그 역할을 한다. 서유럽이나 중남미, 티베트처럼 종교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들에서는 종교지도자가 부분적으로 그런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한국은 민주공화국이라서 왕실이 없고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다종교 국가라서 특정 종교의 압도적인 영향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왕실이나 종교에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경우 건국에 크게 이바지한 선조들을 ‘국가의 뿌리’로 받들면서 국민 통합과 정체성의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70주년을 지났지만 아직도 온 국민이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건국의 아버지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마련인 초대 대통령 이승만조차도 한쪽에서는 ‘국부(國父)’로 추앙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독재자’로 거세게 비난한다. 이승만 대신 김구를 국가의 뿌리로 숭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또 최근 불거졌던 ‘김원봉 서훈 논란’은 현대사의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가의 정신적 기초를 다지고 국민의 충성심을 유도하는 ‘기억의 정치’가 아직 한국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따라서 한국현대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국가상과 통일 민족국가의 모습을 확실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사회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2. 미국의 ‘Founding Fathers’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근대국가 건설에 크게 기여한 선조들을 ‘건국의 아버지들’로 추앙한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알려졌고, 한국의 경우와 대비하며 참고할 만한 사례는 미국이다. 미국인들은 건국 후 30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을 거의 성인처럼 떠받든다. 화폐 속의 인물도 이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의 삶과 활동·사상을 다룬 평전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으며 끊임없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의 특징을 몇 가지 짚어보면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은 영국 식민지에서의 ‘해방’ 을 가져 온 독립전쟁이나 그 이후 헌법 제정과 연방정부 수립 등 ‘건국’ 과정에서 뚜렷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학자와 논자들에 따라 적게는 10명 내외,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르는 등 범위가 다르지만 비교적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있다. 우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2대 대통령 존 아담스,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언론출판인이자 외교관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이들에다가 대륙회의 의장과 초대 연방최고재판소 장관을 역임한 존 제이, 제4대 대법원장으로 35년간 재임한 존 마셜, 매사추세츠 주지사 새뮤얼 아담스, 초대 버지니아 주지사 패트릭 헨리, ‘버지니아 권리장전’ 을 기초한 조지 메이슨 등을 보통 추가한다. 범위를 넓혀서 많게 잡을 때는 미국 독립선언에 13개 주를 대표하여 서명한 사람들과 1787년 열린 헌법제정 의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포함한다.

미국의 경우와 관련하여 먼저 한 가지 강조할 사실은 대부분의 학자나 논자들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서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특별한 위상(‘the Foundingest Father’: ‘건국의 최고 아버지’)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워싱턴이 독립전쟁에서 식민지 군대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독립을 이끌었고, 건국 후에는 초대 대통령으로 8년간 재임하면서 국가의 초석을 놓는 등 미국 건국에 대한 공헌이 다른 ‘건국의 아버지들’ 보다 압도적이라는 것에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동의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을 고찰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선 미국은 ‘자력’ 으로 식민지 해방을 이루었고, 이후의 건국 과정도 해방 과정으로부터 별다른 단절 없이 ‘연속적’ 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 를 선정하는 작업에 큰 갈등과 대립이 없었다. 해방과 건국의 중요한 단계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한 사람이면 충분했다. 또 건국 초기의 국가지도자들이 대부분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인물들이었기에 국가적 정통성과 정당성에 아무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독립전쟁과 건국 초기의 중요한 국가지도자를 중심에 놓고 각 시기와 부문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해서 국가 출범과 토대 확립에 크게 기여한 인물을 추가하는 방식이면 됐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미국은 민족과 역사 등 국가적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동일한 근원이 약했기 때문에 독립선언서나 연방헌법 등에 담긴 이념과 사상이 정체성의 기본이 됐다는 점이다. 미국은 자기네 국가가 이념에 기초해서 건국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것을 만드는데 기여한 인물들을 매우 중시한다. 그리고 이처럼 이념과 사상을 표현한 각종 문건이 부각됨으로써 ‘건국의 아버지들’ 역시 정서적 측면보다 이성적 측면이 주로 조명을 받게 됐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심동체로 활동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건국 후 국내 정책을 놓고 중앙집권을 강조하는 연방파(해밀턴, 존 아담스)와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공화파(제퍼슨, 제임스 메디슨)로 나뉘어 오랫동안 갈등했다. 또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친영(親英)파와 친불(親佛)파로 나뉘어 대립했다.

3.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1)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경우 ‘건국의 아버지들’을 선정할 때의 기준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해방’과 ‘건국’에 기여한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초대형 6.25전쟁이 발발해서 국가가 소멸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였었기 때문에 ‘호국’ 또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세 가지로 늘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해방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함으로써 ‘타력’에 의해 성취됐고, 건국과 그 후속 과정이 거센 이념적 대립과 대결 속에서 매우 ‘단절적’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건국의 아버지’들을 선정하는 작업이 미국에 비해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논의 과정 자체가 국가적·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고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 미국은 ‘독립’ ‘건국’의 두 가지 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만 충분히 충족시키면 ‘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은 ‘해방’ ‘건국’ ‘호국’의 세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건국의 아버지’가 되기 어렵다.

또한 대한민국은 미국과 달리 국가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 또한 매우 강한 나라이다. ‘해방’ 때까지는 오히려 민족 정체성이 중심이 됐고, 독립은

동가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이념과 상관없이 정서적 공감대가 매우 강한 편이다. 하지만 1920년대 이후 형성돼 내연하던 근대국가 건설 이념의 차이가 해방 후 ‘건국’ 과정에서 분열되고 폭발하여 남과 북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됐다. 그리고 이들 두 개의 국가 정체성이 정면충돌해서 동족상잔의 전쟁이 벌어진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선정하는 기준을 대한민국의 역사 정체성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차례이다. 먼저 대한민국의 역사 정체성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민족 정체성’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민족의 해방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된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시점에서 국내외에 다양한 이념과 기반을 가진 독립운동가와 민족운동가 그룹이 존재했다. 이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저마다 정통성(orthodoxy)과 정당성(legitimacy)을 주장하면서 근대국가 건설의 정치적 주도권을 놓고 경쟁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임정 그룹에게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의 다른 그룹들보다 월등한 우위를 인정한 것이다. 해방 직후 적어도 우파 내에서는 ‘임정 봉대(奉戴)’가 대세였고, 현재도 ‘임정 법통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 전문의 규정이 이해될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의 또 하나 축인 ‘국가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는 건국 시기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국방, 외교 등 국가 운영의 각 부문별로 검토해야 한다. 또 6.25 전쟁 시기의 활동과 행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의 두 축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선돼야 할까.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국가 정체성’이 ‘민족 정체성’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민족 정체성’은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확실하게 확보된 후에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선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의 역할이 1차적인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해방’이 2차적인 판단 기준, ‘호국’이 3차적인 판단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한 인사들은 1차 판단 기준에서 탈락된다. 김일성·박헌영·김원봉처럼 3차 판단 기준에도 저촉되는 인물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2) ‘건국의 아버지들’이 될 수 있는 후보들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요인들 가운데서 ‘건국의 아버지들’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은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국무총리 이범석, 법무부장관 이인, 무임소장관 지청천 등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임정 요인(이승만-이시영-신익희-이범석-지청천)이거나 국내파 민족운동가(김병로-이인)로 ‘해방’ ‘건국’ ‘호국’의 어느 기준을 적용해도 결격 사유가 없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정치(이승만-이시영-신익희), 국방(이범석-지청천), 사법(김병로-이인)에 있어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건국’과 ‘호국’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이승만이 미국의 조지 워싱턴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건국의 최고 아버지’라는 데 동의해야 할 것이다. 그는 냉전이 시작되는 해방 후의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읽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주도했고, 공산주의자들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의 참화에서 연합국의 힘을 빌어 대한민국을 구해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직간접으로 도운 김성수(한민당 수석총무, 2대 부통령), 장면(파리 유엔총회 대표단장, 초대 주미대사), 조병옥(파리 유엔총회 특사단장, 미군정 경무부장), 정인보(감찰위원장) 등 국내파 민족운동가들을 ‘건국의 아버지들’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적 기반을 강화하거나(김성수-조병옥), 대의명분을 보완하거나(정인보), 국제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외교 활동(장면-조병옥)에 두드러진 공헌을 했다.

그러면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김구 주석, 김규식 부주석, 조소앙 외무부장 등 임정의 다른 요인들은 ‘건국의 아버지들’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이들 가운데 김구를 제외한 다른 인사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육성론’을 펴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선언했다. 그리고 일제시기 대표적인 국내파 민족운동가로 미군정 민정장관을 역임한 안재홍 등과 손을 잡고 ‘민족진영강화위원회’로 집결했다. 민족진영강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제2대 국회의원을 뽑는 1950년 5.30선거에 출마하여 많은 사람이 당선됐다.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은 조금 넓혀 보자면 1948년 5.10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사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한 1950년 5.30선거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인사들까지는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방 당시 임정의 상징이었던 김구의 경우는 좀 문제가 복잡하다. 그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고, 5.10선거 직전인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에 참여했으며, 그가 이끄는 한독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참여를 거부했다. 하지만 김구는 1948년 12월 파리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 로 승인받자 이를 환영하는 등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1949년 6월 살해되기 직전 그의 '마지막 노선' 에 대해서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분분하다. 하지만 그가 수행했던 '해방' 과정에서의 절대적 공헌과 임정 주석으로서의 상징성, 우리 헌법 전문의 규정, 그리고 광범위한 국민적 추앙 정서 등을 고려하면 김구를 '건국의 아버지들' 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 하나 숙고해야 할 부분은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과 건국 노선이 일치했던 인사들에 대한 배려이다. 해방 당시 북한에는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상당수의 민족운동가들이 있었고, 조선민주당 등으로 집결해서 정치활동을 벌였다.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인사들은 소련군과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정치적-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에 크게 기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에 일정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국회에 특별선거구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해방 전후 북한 민족주의 운동의 최고지도자로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 월남을 끝까지 마다했던 조만식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더욱 보장하여 통일 후 남북한을 아우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맺음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에 대한 토론과 합의 과정은 해방 직후 독립운동가 출신 정치지도자들의 건국 노선 차이와 주도권 경쟁 때문에 불가피하게 빚어졌던 정치적 분열을 후손들이 역사적 관점에서 통합하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논의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자신들의 오늘의 이념-노선-정치적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자기 주장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긍정하는 모든 정치 세력을 하나로 묶는 커다란 우산을 만들어 씌운다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모두가 소이(小異)를 버리고 대동(大同)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이 출범 후 고난 끝에 70년 동안 쌓아온 모든 대내외적 발전과 체제를 '적폐' 로 몰아서 부수고 파괴하려는 시도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현재 상황은 모든 '친(親)대한민국' 세력의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에 대한 논의는 바로 그 중요한 계기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에 대한 논의는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유우파 내부의 과제이다. 하지만 70년 전 역사적 진실과 그것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현 집권세력을 비롯한 좌파 진영

의 역사인식이 갖고 있는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는 효과도 아울러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좌파 내부에서 그동안 전략적으로 편승해온 ‘임정법통론’ 을 둘러싸고 60대 이상과 50대 이하 사이에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김원봉 서훈 주장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에 대한 논의는 자유우파 내부의 우호적인 심층 토론을 통한 입장 조율과 아울러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사적 울타리 안에서 교묘하게 기생해온 반대한민국 좌파의 역사적 정체를 폭로해서 그들을 대한민국 밖으로 몰아내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토 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장 영 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학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토론회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장 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학

I. 들어가며: 국가정체성에 대한 논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II. 국가정체성이란 무엇인가

1. 정체성(Identity)의 일반적 개념
2. 국가에 있어서 정체성의 의미

III. 국가의 기본적 성격 및 구조와 근본가치

1. 현대국가의 특성과 헌법
2. 헌법의 기본이념과 국가의 성격
3. 헌법의 근본가치란 무엇인가

IV. 대한민국헌법의 근본가치와 국가정체성

1.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따른 국가의 정체성
2. 국가정체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함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

V. 국가정체성의 이해와 관련 문제

1.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정책형성의 여지
2. 정치적 자유의 한계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 국가정체성과 과거사규명 문제
4. 국가정체성과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VI. 맺으며: 국가정체성 논란의 의미와 한계

I. 서: 국가정체성에 대한 논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정치는, 특히 민주정치는 말의 미학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거나, 연단을 점거하는 등 이른바 실력행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민주정치의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민주정치가 말의 미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만약에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국가적인 중대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다수결을 통한 의사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의 견해도 바뀌고, 다수의 지지를 받아 집권하는 정당도 계속 바뀌게 된다. 그런 가운데 소수자들,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야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정상적인 경우라면 야당은 차기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위하여 모든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당연하다. 따라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책을 국민에게 잘 홍보하며, 그것이 여당의 정책보다 더 낫다는 것을 설득하려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여당과 야당이 의사당에서 다시 몸싸움을 하게 된다면, 국민은 그 어느 쪽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집권을 원하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보기에 더 나은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정당이어야 할 것이다. 즉 정책을 가지고 말로써 다투고, 그것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 정치권에서 -비록 지역구도를 완전히 타파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역정당의 색깔을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는 점이나, 보수와 진보의 정책 대결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몸싸움이 아닌 말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지나치게 날카로워지고, 그로 인한 국가적·국민적 갈등이 위험수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보수와 진보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자유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같은 특정한 세계관을 전제하는 이념이라기보다는 변화의 속도 내지 방법에 대한 성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변화보다 안정을 더 중요시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에 따라서 양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 어느 쪽도 변화와 안정의 극단을 추구할 수는 없으며, 그 사회의 현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추구하는 세계관적 이념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이 무조건 회피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갈등이라도 공동체의 근본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II. 국가정체성이란 무엇인가

1. 정체성(Identity)의 일반적 개념

우리가 흔히 정체성으로 번역하는 Identity는 동일성이라는 말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것은 정체성(Identity)의 사전적 정의가 “개체가 시간과 장소의 상위, 여러 성질의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개체가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개체로서의 본질을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변화 이전과 이후에 동일한 개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물론 세계 속의 존재자 모두에 대하여 그 정체성을 따지지는 않는다. 예컨대 산소 원자의 정체성이나 물 분자의 정체성, 또는 100원짜리 동전의 정체성을 구별할 수도 없고, 구별할 실익도 -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체로서의 인간이나 집단의 정체성 문제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개인에게 있어서 정체성 문제는 삶의 방식을 규정 내지 평가하는 요소로서, 그리고 집단의 경우에는 그 성격과 기능을 좌우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2. 국가에 있어서 정체성의 의미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가에 있어서 정체성이란 그 국가의 고유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국가의 역사적·문화적 배경부터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건국된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의 제도를 수입하

고 그들의 생활방식을 답습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미국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역사적·문화적 배경만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전체적으로 해명하지는 못한다.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란 말 그대로 배경일 뿐이고, 그 기초 위에서 다시금 다양한 국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국가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이념과 목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및 운영원리 등을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그 국가의 기본적인 성격 내지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국가의 고유성을 정리해낼 수 있을 때, 그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Ⅲ. 국가의 기본적 성격 및 구조와 근본가치

1. 현대국가의 특성과 헌법

현대국가는 ‘헌법국가’라고 할 수 있다. 몇몇의 독재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주주의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민주주의의 구체화를 위하여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입헌적 질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가의 구조와 성격은 그 국가의 헌법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며, 국가의 정체성은 동시에 헌법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은 대부분 일정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정치체제 내지 정부형태는 상이하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이념 내지 지향점은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존엄을 전제로 자유와 평등을 구체화시키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제도에 따른 차이도 무시될 수는 없다. 예컨대 대통령제 정부형태 하에서의 국가권력의 구성 및 운용방식이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 하에서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으며, 그로 인하여 국가의 내적 구조와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대통령제는 민주적이고 그 외의 정부형태는 비민주적이라거나 혹은 그 반대의 주장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정부형태의 차이는 단지 정치적 조건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이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이 헌법의 기본이념에 있어서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것도 국가와 헌법의 본질에 대한 침해

는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2. 헌법의 기본이념과 국가의 성격

결국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 따라서 국가의 정체성을 평가하는 - 가장 중요한 요소는 헌법의 기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의 기본이념 자체가 부정될 경우에는 이미 국가 자체의 기초가 부정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기존의 헌법이념과 양립될 수 없는 새로운 헌법이념을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헌법, 기존의 국가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 이와 같이 헌법의 이념 자체를 직접적으로 부정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국가질서를 위한 다양한 주장이 허용되고 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만일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상태를 고착화시키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합리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관철될 수 없는 무의미한 시도이기도 하다.

특히 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수용하는 현대 헌법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견해들, 다원적인 의사와 이해관계를 수용하고, 그들의 경합과 충돌, 타협과 조정을 통하여 국가질서를 계속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정치형태이며 헌법원리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 헌법의 이념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닌 한 - 다양한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3. 헌법의 근본가치란 무엇인가

헌법학에서 가치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이다. 과거 법실증주의가 헌법이론을 주도하던 당시에는 법학의 가치중립성을 법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떤 공동체, 어떤 헌법도 가치 및 가치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미 헌법제정 자체도 일정한 가치평가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일정 한도의 가치평가는 법에 있어 불가피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써 헌법에 있어서의 가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가치의 정립이 과연 어디까지 미치고 있으며 또 미쳐야 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헌법에 있어서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대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1970년대 후반 서독에서 있었던 이른바 근본가치논쟁이다. 이 논쟁의 원래 출발점

이 되었던 것은 낙태나 이혼과 같은 -종래의 윤리적 또는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법적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라는 문제였다. 이 문제는 곧 국가가 지켜야 하며, 그 기초 위에서 국가와 헌법이 존립하고 있는 근본가치란 과연 무엇인가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근본가치의 문제는 여러 정치적·사회적 영역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며, 또한 헌법학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존립의 기초에 관한 많은 연구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근본가치에 관한 논쟁의 바탕에 깔려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긴장관계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다원성과 근본가치와의 긴장관계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다수의 의견과 근본가치와의 긴장관계이다.

(1) 민주적 다원성(=자유)과 근본가치의 긴장관계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자유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서만 남들과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본가치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불가침의 영약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다원성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프랭켈(E. Fraenkel) 이후로는 다원주의에 있어서도 일정한 공동의 기초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보편화되고 있다. 즉, 근본가치라는 것은 다원성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로 모든 사람이 합의한 공동의 기초라고 인정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근본가치는 다원적 사회의 사회윤리적 공통분모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적 다원성과 근본가치간의 긴장관계는 다원성의 올바른 발현 속에 해소될 수 있다.

(2) 국민의 다수의사와 근본가치의 긴장관계

근본가치에 대한 물음은 또한 그 궁극적인 정당성근거를 국민에 의한 지지에 두고 있는 민주적 정부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국민의 사실적 다수의견에 반하여 가치를 정립하고 또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국민주권을 본질적 징표로 하는 민주주의가 국민의 동의에 기초하는 국민의 정부라는 것(혹은 국민의 정부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국민의 주권이 어떻게 행사되는지 내지 민주적 국가질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성되며 민주적 의사형성이 어떤 절차와 내용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따라 다수결이 민주적 의사결정방법으로 인정되고는 있으나 그것이 민주적 정부는 항상 그때그때의 국민 다수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여 그로부터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는 오늘날의 사회적 상황이나 정치적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다. 오늘날 직접민주제가 아닌 대의제가 민주주의 실현방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국민이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올바르게 판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국가기관 내지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통제라는 측면이 항상 문제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스스로가 그때그때의 국가적 사안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원한다. 그러면 근본가치는 과연 어떻게 국민의 다수의사에 대립하여 스스로를 관철시킬 수 있는가?

근본가치의 의미와 실효성은 결국 그때그때의 다수에 의해 정해지는 정치적 결정 보다는 역사 속에 형성된 헌법이념과 헌법원리에 대한 숙고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근본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IV. 대한민국헌법의 근본가치와 국가정체성

1.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따른 국가의 정체성

그러므로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정체성이란 헌법의 기본이념과 기본원리가 확고하게 유지됨으로써 헌법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국가와 헌법의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 그리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기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국가와 헌법의 기본적인 구조와 성격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만일 국가와 헌법의 기본적인 구조와 성격의 동일성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면, 헌법 자체에 대한 개정도 정체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이유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헌법의 개정에 있어서 「기본적 동일성의 유지」를 강조하면서 이를 넘어서는 것은 더이상 헌법의 개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가정체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오늘날 헌법원리로 불리는 것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 그것은 헌법의 특정 영역에서 작용하는 원리가 아니라 헌법 전체의 구조와 성격을 좌우하는 기본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어떤 것을 기본원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 그리고 사회국가 원리가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론(異論)이 없으며,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 원리가 헌법의 구조와 성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라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요소를 통해 형성·발전되었고, 그에 따라 오늘날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도 다양하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에서부터 강조되었던 국민주권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으며, 오늘날 민주주의가 대의제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다수결원리, 다원주의에 기초한 각종 단체 및 정당의 구성과 활동 등도 현대민주주의에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종래 자유의 이념에 따라 상대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하였던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의 대립을 통해 그 한계를 확인한 이후, 민주주의의 상대주의적 성격에 일정한 한계를 그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함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출발점은 (가치)상대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이었다. 즉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민주주의는 그 결과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까지 관용으로 일관하였고, 결국 민주적 절차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모순된 결과를 낳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이러한 상대주의적 성격을 한정함으로써 가치구속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상대주의를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지

만, 결코 상대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정치적 주장이나 시도에 제약을 가할 뿐이고 그 밖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은 여전히 폭넓게 허용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종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로서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시켜야 한다고 보았던 견해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침해되어서는 안될 최소한의 핵심요소들을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다원적 의사 및 이해관계들의 경합과 충돌, 조정과 타협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원적 정치과정을 통해 항상 새롭게 이루어지며, 이것은 미리 규정될 수 없는 것이다. 최대한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은 가능한 한 폭넓게 인정되는 다원성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이러한 다원성에 대한 제한으로 기능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원성을 부인하거나 이를 일정한 가치에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원성이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기 위한 공동의 기초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은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책이 대한민국헌법의 근본가치에, 그리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었다.

V. 국가정체성의 이해와 관련 문제

1.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정책형성의 여지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즉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지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유의 이념은 국민 개개인이, 그리고 정당을 포함한 모든 단체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또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러한 자유의 이념이 억압되는 국가라면, 그 국가는 더이상 민주적이라 일컬어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로자 룩셈부르크의 말처럼 자유란 항상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만일 집권자의 구미에 맞는 생각이나 발언만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자유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즉 반대할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바로 이러한 반대의견에 항상 열려 있다는 점, 그럼으로써 항상 새로운 생각을 수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정책형성의 여지가 늘 존재

한다는 점이다. 이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다.

2. 정치적 자유의 한계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러나 절대적 상대주의가 아닌 가치구속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현대국가에서는 자유의 이념 내지 이를 통한 정당들의 정책수립과 집행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즉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하여 파괴하려는 개인이나 정당의 시도는 금지되며, 이를 추진하려는 정당의 정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헌정당해산이라는 헌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방어적 민주주의!).

이렇게 볼 때, 민주국가의 근본가치에 해당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위헌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국가정체성의 수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정치적 견해나 정당활동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비록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부정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정치적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E. Denninger가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로서 남아있다는 점에 그 정당성근거가 있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주의이기를 포기한다면 (특정 가치의 절대화를 통한 다원성의 억압!) 그것은 민주주의의 수호가 아닌 민주주의의 파괴, 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헌법이 독일기본법의 예에 따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요건과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정당특권!)은 바로 이와 같이 강력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이 남용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3. 국가정체성과 과거사규명 문제

한 때 과거사규명의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를 국가정체성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즉, 과거사를 올바르게 규명하여야 국가정체성이 바로 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건국절 논란 등을 통해 국가정체성 문제가 거론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매우 단순하고 소박한 생각

일 뿐이다. 과거사 규명 또는 건국절 논란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국민들이 관심 가질 중요한 사항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앞으로의 국가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의 규명이나 건국절 논란이 국가의 구조와 성격을 좌우하는, 그래서 국가의 동일성 내지 정체성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그렇다면 과거사를 규명 여하에 따라서, 혹은 건국절을 언제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국가가 된다는 기이한 논리가 성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사 규명 등 문제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국가정체성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의 차원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국가정체성과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또 한 가지 첨예한 대립의 대상으로 문제된 바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 개폐의 문제이다. 과거 여야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의 기초를 붕괴시키는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이를 국가정체성에 대한 침해로까지 이해하려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헌법의 중심적 가치나 기본원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정체성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물며 일개 법률을 폐지하는 것이 - 그것이 헌법이념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문제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여야가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국가보안법이 상징하는 각기 다른 두 가지 측면이다. 여당은 국가보안법이 인권유린의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은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상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때문에 여당은 폐지를, 야당은 존치를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다른 측면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당은 국가보안법의 폐지 후 형법의 보완 또는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또 야당도 국가보안법의 개정 필요성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런 공통점들을 생각하면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를 국가정체성의 훼손 문제로 보는 시각 또한 문제가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도 국가정체성의 문제는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VI. 맺으며: 국가정체성 논란의 의미와 한계

지금까지 국가공동체의 근본가치가 무엇인지를 정리하였고, 이를 기초로 헌법국가에서 국가정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국가정체성에 대한 헌법적 이해에 기초하여 위헌정당해산의 문제, 과거사청산의 문제, 국가보안법폐지의 문제 등이 과연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국가공동체의 근본가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인류사적 보편가치인 인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들이며,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정체성이란 국가의 기본이념과 원리, 기본적인 구조와 성격을 통해 나타나는 그 동일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정체성의 침해란 국가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통하여 더 이상 같은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형식상으로는 헌법의 개정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헌법질서를 구성함으로 인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었던 경우(과거 공화국이 바뀌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체로 이에 해당된다)에 국가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종래의 관행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만으로 정체성의 혼란 내지 위기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구속력 있는 (헌)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만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말의 미학이라고 하지만, 논리적 근거와 설득력이 없는 말,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과는 무관한 정쟁을 위한 말까지도 민주주의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 속에서 다양한 정책대결이 벌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국가공동체의 근본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며 국가정체성의 훼손 또한 그러하다. 단순한 정책적 차이, 정치적 대립을 근본가치의 침해 또는 국가정체성의 훼손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위험하지만, 근본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국가의 본질과 과제를 외면하는 것이기에 더욱 위험한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토 론

'대한민국의 역사정체성과 문재인정부의
일탈'에 관한 토론문

정 경 희 영산대학교 교수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토론회

'대한민국의 역사정체성과 문재인정부의 일탈'에 관한 토론문

정 경희
영산대학교 교수

이 발표문에서 잘 묘사되었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역사적 성취를 이룩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그 “세계적 성공국가의 상징” 대한민국이, 최근의 모든 지표에서 보듯이, 이제는 급속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이 발표문에서 김광동 원장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보여준 역사인식과 정부행위에 대한 평가를 세 개의 장으로 구분해서 시도하고 있다. 첫째는 민족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가, 둘째는 자유민주 질서 및 번영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가, 셋째는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등과 관련된 국제 연대의 틀과 이 틀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이다. 이 발표에서 내리는 결론은 단호하다. 현 정부는 민족 가치를 구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민족 가치의 혼란과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유민주 질서와 번영의 가치를 계승하기는커녕 그에 반하는 ‘청산 정치’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 건국 이후 70년간 지속되어 온 국제연대의 균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본 토론에서는 발표자가 제시한 대 전제, 즉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반(反)봉건 근대문명화, 반(反)식민 독립번영, 반(反)공산 자유민주체제의 확립의 길을 걸어왔다는 주장에 적극 찬동한다. 또한 제시된 결론을 통해서 오늘날의 정치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해 발표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토론자의 소임에 충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소소한 제언(提言)을 하거나 덧붙이는 말씀을 드리려 한다.

분석의 첫 번째 장(章)에서 발표자는 문재인 정부가 민족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여기서 발표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는 반(反)민족의 상징이므로 ‘민족의 편에 서라’는 김정은의 지난 4월의 제안은 반민족노선을 함께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었으나 문재인정부는 명백한 반민족을 반민족이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모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모호한’ 태도는 국민들, 나아가 전 세계를 겨냥한 ‘고도로 계산된 장치’ 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현 정부는 표면적, 공개적으로는 북한의 이른바 ‘우리민족끼리’ 라는 공조(共助) 제안에 손잡

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면서 이면에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노선에 이미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가까운 사례는 올 해 7~8월에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 그리고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 배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상반된 대응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일본의 수출우대국가 명단 제외에 대해서는 ‘침략’이라고 규정하는 과도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민족끼리’에 동조함으로써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에 반(反)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여러 사례를 들어 북한 체제가 반민족체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사례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 민족을 대상으로 한 6·25침략전쟁을 벌여 400만 민족의 희생을 초래한 전범(戰犯)정권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사족(蛇足)을 덧붙이자면 6·25전쟁 하나만 보더라도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외칠 자격이 없는 반민족체제임이 명확하다. 잘 알려진 대로 6·25전쟁은 소련과 중공(中共)이라는 이민족을 한반도에 끌어들여 동족(同族)을 친 전쟁이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또한 문재인 정부가 3·1운동을 반민족적 전체주의인 북한과 함께 기념하자는 제안은 3·1운동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북한이 제시한 ‘우리민족끼리’라는 반민족적 연대에 편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토론자가 보기에 이는 ‘우리민족끼리’라는 반민족적 연대에 단순히 ‘편승’한다기보다는 이 반민족적 연대를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왜냐하면 지난 7월, 국방부가 내년에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북한과 공동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북한이라는 반민족 세력을 옹호, 두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서 70여 년간 민족가치를 실현해온 세력에 대해 ‘독재와 적폐’의 명예를 씌우는 전도(轉倒)된 역사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그 목표는 민족의 분노의 대상을 자유보수와 일본을 포함한 반외세로 향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지적한다. 발표자는 여기에서 분노의 대상을 “일본을 포함한 반외세”라고 에둘러 말하고 있으나 그것이 일본뿐 아니라 나아가 미국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궁극적 목적은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해체하는 데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분석의 두 번째 장(章)에서 발표자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이 지향해온 역사적 정체성을 왜곡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적 신화 두 가지 -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이 잘못된 출발이었다는 것, 그리고 1981년의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한국에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 - 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에 맞서 지난 70년간 이루어진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립과 발전이 세

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근대화 혁명”이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발표자의 역사해석은 거시사적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을 프랑스 혁명에 비견되는 ‘혁명적 사건’으로 파악하는 이인호 교수의 해석과 일맥상통한다.¹²⁾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굳이 부정하며 건국을 1919년으로 규정짓고자 했던 까닭이 ‘자유민주’ 세력 혹은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자유민주체제를 주도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발표자의 지적은 정곡을 찌른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역사 청산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전임정부를 계승 발전시킬 과제가 주어졌을 뿐임에도 ‘촛불혁명’ 정부 운운하며 대한민국 역사 허물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대한민국은 일관된 역사과정의 축적물임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발표의 핵심 논지인 동시에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촛불시위’는 ‘촛불혁명’이라고 강변하면서 정작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이룩한 “근대화 혁명”은 부정하고 나서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 정체성의 일탈”이 대한민국을 혼돈과 후퇴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는 발표자의 지적 또한 매우 예리하다.

분석의 세 번째 장(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건국 이후 70년간 지속되어 온 국제연대를 어떻게 균열시키고 있는가를 설명한다.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반일, 친중, 친북을 대한민국의 역사정체성으로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만들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발표자는 1945년 이후 대한민국을 공격한 적이 전혀 없는 일본을 대상으로 항일을 외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 공산당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반외세(反外勢) 차원의 항일 논리를 이어받은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

토론자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현 정부의 기조(基調)가 반일 뿐 아니라 반미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2017년 12월, 중국과의 소위 ‘3不 합의’ 가운데 미국과 미사일방어(MD)를 함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만 보아도 이를 예측할 수 있다. 또 하나 덧붙일 것은, 현 정부의 반일·반미 정체성이 북한의 역사 인식과 그 궤(軌)를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자기나라를 침략한 “철천지원쑈”로 규정하고, 아예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죄행』이라는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¹³⁾

12)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거시사적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을 프랑스 혁명에 비견되는 혁명적 사건으로 파악한다. 1948년의 건국은 자주독립과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건립의 꿈이 달성된 혁명적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이인호,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 거시사적 비교를 통한 건국의 재인식을 위하여」, 『대한민국은 왜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가』, 이주영 엮음, 뉴데일리, 2011, 108-137.

13) “미제와 일제는 백수십년전부터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

결론에서 발표자는 문재인정부가 반일에 몰두하는 것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길을 걷는 세력에 대한 강한 ‘부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반일 성향을 ‘부채의식’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현 정부의 요직을 거쳤거나 현재 요직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주의 운동 전력(前歷)이 있는 사람들임을 고려할 때 현 정부 자체가 사회주의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자연스레 들기 때문이다.

을 들썩운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이다. 우리는 지난날 미제와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최악의 역사를 잘 알고 놈들을 끝없이 증오할줄 알아야 한다.” 북한 고등중학교 6학년용 교과서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죄행』, 허성철, 김용호, 2011, p.2.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토 론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에 관한 토론문

주 익 종 이승만학당 이사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토론회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에 관한 토론문

주 익종
이승만학당 이사

현재 한국인은 하나의 국민이라 하기 어려울 만큼 국가 정체성이 분열되어 있고 심지어는 국가 의식, 국민 의식마저 박약하기 짝이 없음. 현실에서 통일된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을 선정할 필요성에 동의함.

- 추상적 이념에 대한 이해, 동의보다는 인물에 대한 공감에 더 용이
- 대한민국을 세운 이들이라는 이미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의 정체성 확립 필요
그 대한민국을 세운 주역은 누구인가,
각기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관한 구명 필요

○ 미국의 founding fathers

식민지 해방을 위한 독립 전쟁과 헌법 제정, 정부 수립 등 건국 과정에서 뚜렷한 역할을 한 인물.

선정 및 수용 과정에 관한 이해도 필요.

○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 선정 기준

해방, 건국과 호국 두 과정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는 기준 제시...국가적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 모두 중요한데, 이중 전자가 더 중요하다고 봄.

그러나 양자의 구별에 의문. 일제에 대해 [공산주의자로서] 싸웠으나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 궤방한 인물(김일성, 박헌영 등)은 일고의 여지도 없음. 아무리 일제와 치열하게 싸웠더라도 결국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 궤방한 것은 결국 사유.

• 건국의 아버지들 후보군 :

당사자가 1945년 이후에도 살아 있었다면 유의미한 기준이지만, 그 전에 죽어서 두 번째 테스트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경우는 어찌할 것인가.... 안창호

안창호의 실력양성노선은 대한민국 건국 정신이요, 그 후계 세력은 건국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

· 현 헌법 전문에서 임정 요인들에게 우위 인정했다는 주장은 동의 곤란.

현 헌법 전문 해당 규정이 사실 충실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직선제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몇몇 정치인, 학자의 담합으로 들어간 것. 추후 헌법 개정시 수정 필요. 제헌헌법 이래 ‘임정 계승’ 론은 1930년대 말 이후 임정세력, 특히 해방과 더불어 귀국한 임정 요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1919년 9월 통합 임시정부를 가리키는 것. ‘임정’ 봉대와 ‘임정’ 법통에서 ‘임정’ 은 상이함.

· 김구 평가 문제

김구는 1948년 1월 전까지는 이승만의 충실한 협조자. 특히 1940년 이후 임정 승인 활동, 연합국 지원 획득 활동에서 이승만과 굳건히 제휴.

그렇지만 1948년 소위 남북협상과 그 후 대한민국 불인정 활동은 너무나 큰 흠결. 대한민국 건국을 직접 반대 훼방한 만큼, 건국의 아버지라 할 수는 없음.

○ 현 역사전쟁 하 건국의 아버지들 선정 논의의 의미?

현 역사학계 주류는 대한민국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의식이 전혀 없음. 잘못 세워진 나라, 다시 세워야 할 나라, 진정한 역사는 향후, 예컨대 남북연방제 통일 등에서 시작된다고 봄.

이승만은 물론이고 김구조차도 배제하려 함. 김원봉 서훈 논란, 국군의 뿌리 운운은 그 시초.

이런 상황에서 건국의 아버지들 선정 주장은 생똥맞은 일.

우선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확립하며, 이승만과 김성수를 복권시키는 일임. 이를 위한 대대적인 선전전을 해야 함. 그간의 수세적, 그것도 결국 패배하는 싸움을 할 게 아니라, 공세적이며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함. 일례로, 이승만학당의 반일 종족주의 타파 운동. 또는 한국 공산주의자 인명사전, 반대한민국인명사전 편찬 등도 그 후보.

그리고 향후 자유 우파 집권 때 교과서 교과과정과 집필기준을 개정하고, 대한민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을 역사학계에서 축출, 도태시켜야 함.